

배포일시	2023년 3월 31일
보도일시	즉시

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, 바이든 부자증세와 윤석열 부자감세,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펄크 징후

- 2월 누적 국세수입 전년대비 15.7조원 감소 등 세입결손 징후 -

-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(원장 정태호 의원)은 3월 31일(화) “바이든 부자증세와 윤석열 부자감세,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펄크 징후” 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.
-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“미국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국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악화되는 가운데도 부자감세를 단행” 했으며 그 결과 “2월 현재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5조 7천억원 감소하는 등 세입결손 징후를 보인다” 고 발표했다.
- 보고서를 작성한 채은동 연구위원은 “지난 3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6조 8,830억 달러(원화 8,950조원)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” 했는데, 이는 “전년대비 8% 증가한 확대재정 기조인 반면, 윤석열 정부는 2022년도 추경예산 대비 6% 감소한 긴축재정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” 고 비교했다.
- 채 연구위원은 “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세,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, 법인세율 인상 등 3대 증세를 통해 10년간 5조달러를 마련하고, 이를 단기적으로 민생지원에, 중장기적으로 적자재정 감축에 사용할 예정” 이라고 분석했다. 특히,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의 경우 증세한 금액의 87%를 민생에 사용하는 반면, 윤석열 행정부는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지원에 인색하다며 동일한 경제상황에 대한 양 정부의 차이점을 비교했다.

-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행정부가 경기침체 예측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10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부동산부자, 초이익법인, 주식부자 등 3대 부자감세(2023년 6조원, 5년간 60조원)를 추진했으며, 2023년 2월 현재 세입결손 징후가 농후하고, 윤석열 행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/중산층을 위한 대응책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.
- 민주연구원은 세입결손 징후 3가지를 제시했다. 첫째는 2023년도 2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했고, 진도율 또한 13.5%로 작년 17.7%에 크게 감소한 점이다. 특히, 소득세(△19.7%), 법인세(△17.1%), 부가가치세(△30.0%) 등 3가지 기간 세목 모두 세입이 전년대비 10% 이상 감소했다.
- 채 연구위원은 두 번째 세입결손 징후로 2022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감소한 법인소득을 들었다. 그는 “2022년 상반기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도 법인세를 편성했는데,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GS, SK하이닉스, 정유4사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두드러지게 악화됐다”고 설명했다. 특히,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삼성전자 순이익은 2022년 상반기 29.5조원에서 하반기 16.9조원으로 크게 줄었고, SK하이닉스는 상반기 6.7조원 이익에서 하반기 2.7조원 적자로 전환했다.
- 민주연구원은 마지막 징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8.6%, 서울 17.3% 등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부동산세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기획재정부 또한 중부세 급감을 우려하여 시행령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(60%→80%)을 검토하는 등 세입감소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설명했다.
- 채은동 연구위원은 “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성장률이 1%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에 따라 총수입은 감소하고 총지출은 증가할 것”이며 “미국은 이에 대한 민간성 분석을 예산발표 당시에 함께 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대비가 부족”하다고 진단했다. 채 연구위원은 “과거 박근혜 정부 3년 연속 세입결손의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”을 주문했다.